## 서민 울리는 사채의 덫

# 200만원 빚 독촉 못견뎌 결국 가게 폐업

### "살인 이자 고통 5개월은 지옥이었어요"

### 광주·전남 불법 대부업체 수백개 난립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L(여·43)씨는 가게 운영난 때문에 불법 사채업소의 문을 두드렸다 파경에 까지 몰리게 됐다.

지난해 4월 가게 임대료 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어렵자 불법 대부업자에게 1천만원을 빌린 것이 화근이었다. L씨는 하루 평균 15만원(연 이자율 140%)의 원금과 이자를 대부업자 김씨에게 꼬박꼬박 줬다.

그러나 '가물에 콩나듯' 하던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근근이 운영하던 가게의 문을 닫았다. 빌린 돈 1천만원 중 500만원은 갚지 못한 상태였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 대부업자는 L씨에게 인감도장과 내용증명서 등을 빼앗듯이 가져간 뒤 이를 토대로 L씨 아들 명의의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 경매절차를 밟았다.

남편 몰래 사채를 쓴 L씨는 결국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이혼소송까지 당할 처지에 놓였다. 5개월여 동안 온갖 협박을 당한 L씨는 경찰을 찾았다.

광주시 북구에서 식당을 하는 K(여·51)씨는 지금도 대부업체라면 진저리를 친다. 단돈 200만원 때문에 수개월 동안 갖은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당초 500만원을 빌린 뒤 잔금 200만원이 남았으나, 혹독한 빚독촉 때문에 가게를 폐업하고 잔금을 갚아야 했다. K씨가 빚 200만원 때문에 두 달 동안 대부업자에게 건넨 이자만도 100만원(연 이자율 120%)이었다.

20대 여성 이모 씨는 최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이자를 매주 35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600만원을 빌렸다. 다니던 직장을 잃게돼 원금과 이자를 갚을 길이 없어진 요즘 집으로 찾아와 폭언을 하거나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대부업체 직원의 횡포에 치를 떨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광주시 등록대부업체는 모두 368개소(동구 34, 서구 136, 남구 42, 북구 122, 광산구 34)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광주시의 집계결과 이들 등록업체의 대출총액은 1천900억원에 달했으며, 거래자는 7만8천500명으로 한 사람당 평균 242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전남도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286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순천이 84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목포 77, 여수 59개, 나주·광양 각각 6개 순이었다. 이들 업체의 총 대출 규모는 지난해 10월 말 43억8천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와 경찰은 등록업체보다 음성적인 고리 대출 시장의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불법 대부업체들은 은행권에서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거나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원금의 수백 %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부업체 이용자의 상담 건수는 2천62건으로 2007년 동기보다 무려 16%증가했다. 고금리 횡포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상담이 31%를 차지했고 대부분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당한 케이스였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불법 사금융업자와 관련자는 2004년 1천607명에서 2007년 4천986명으로 급증했고 2008년 1~8월에는 3천659명에 달했다.

광주의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은행권은 물론 등록 대부업체로부터도 돈을 빌릴 수 없는 막다른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불법 대부업자의 '먹이'가 되고 있다"며 "이들은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다 보니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경찰은 '사채의 덫'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급전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대부업체의 합·불법 여부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지자체와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우선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법·불법 업소를 가릴 겨를이 없이 돈을 빌렸다가 결국 낭패를 보게된다"며 "반드시 등록업소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부업 피해신고는 (02)3786-8655~9(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불법 대부업체 직원들이 1일 광주시 동구의 한 상가에서 연락처 등이 담긴 소형 홍보 명함을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이번엔 꼭 통과를" F1 국회 총력전

### 박준영 지사, 민주 의원들 대상 설명회

F1 지원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박준영 전남지사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F1 대회 유치 설명회를 갖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

오는 6일 박준영 전남지사는 국회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 국회 문방위원 및 국제경기지원 특위위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F1 대회 유치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F1 지원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박 지사가 긴급하게 국회 설명회를 갖는 것은 2010년 첫 대회 개최를 위한 F1 지원법이 이번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대회 추진에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지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F1 지원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특별법'과 'F1 특별법'의 연계 처리를 주장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는 이 같은 걸림돌이 없는데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과 연계 처리가 가능해 민주당이 적극 나선다면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번 설명회의 배경에는 F1 대회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회의적인 시각을 바로 잡겠다는 뜻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남도가 너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기류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느냐에 따라 F1 지원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전남도의 업무보고에서 F1 대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F1 지원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여수박람회에 오세요"

### 100개국 참가 목표 유치 활동 본격화

### 외교통상부, BIE 회원국 초청장 전달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참가국 유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일, 외교통상부가 지난달 31일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BIE(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과 UN 등 주요국제기구에 여수박람회 초청장을 전달하는 등 박람회 참가 초청교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직위와 외교통상부는 이번 초청장 전달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참가교섭을 벌일 계획이며, 한국관광공사와 코트라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도 가동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100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 10개 기업 및 NGO 유치를 목표로 참가교섭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인근 선진국들과 해양 및 연안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유럽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을 중점 공략할 계획이다.

조직위와 외교통상부는 이와 함께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2012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것을 물론, 유치사절단을 연중 수시로 파견해 다각적으로 참가교섭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오는 2012년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3개월간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여수 신항 일대에서 개최된다. 조직위는 여수세계박람회가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10조원, 부가가치유발 4조원, 고용유발 9만 명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남에서는 생산유발 6조5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2조5천억원, 고용유발 5만5천명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 "광역경제권 5+2서 5+3으로"

### 민주 김동철 의원 재편안 국회 제출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갑·사진) 의원이 최근 광주·전남과 전북을 분리한 '5+3 광역경제권' 재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호남권이 하나로 묶인 '5+2 광역경제권'을 생활·문화·경제·산업권이 다른 전북을 하나의 권역으로 분리하고 광주·전남을 별도 권역으로 설정한 '5+3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광역경제권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충청), 서남권(광주·전남),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과 전북권, 강원권, 제주권 등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역정서, 협력 용이성 등 5+2 구분 기준을 놓고 볼 때 호남권인 광주·전남과 전북은 경제적 보완관계나 연관성이 없는 인위적 구분이다"며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의 효율적 향상을 위해 광주·전남과 전북을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